

광주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데스크칼럼

김성수

정치부장

sskim@jnilbo.com

자본주의 사회서비스의 '분배적 정의'란 무엇일까? 코로나19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앞다퉈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금 당시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보편vs선별'이라는 말이 있었다. 선별주의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재분배효과가 큰 반면,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

재정적 한계와 정치적 갈등, 소득격차 등 팬데믹을 통해 우리사회는 '복지'라는 사회서비스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던 것 같다.

두 분류의 복지 중 우리는 보편복지를 정의할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수식어처럼 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영국의 윌리엄 베버리지의 '사회보험과 연금서비스에 관한 중앙정부간 위원회 보고서(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온 말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1·2차 세계대전의 포화속에서 탄생했다. 세계대전 중 영국 정부는 전쟁이 끝난 후 영국 사회 재건을 위해 1941년 6월에 베버리지 위원회를 만들었다.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1879~1963)가 위원장을 맡았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원리는 국민 모두에게 사회보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었다.

베버리지는 1944년에는 무상 초·중·고등교육을 담고 있는 교육법, 1946년에는 국가보장법과 국가의료보장법이 만들어져 노령연금, 보편적 의료보장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 근대 사회보장제도의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영국을 복지국가의 '원조' 반열에 올려 놓았다. 보고서가 나올 시기 영국민들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보편적 복지의 상징 어구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붙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복지는 지속가능한 보편복지를 실현하진 못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비롯한 전 생애를 보장하는 영국 복지서비스는 마가렛 대처의 등장과 IMF 기금을 받는 경제위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토니 블레어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등을 거치면서 복지 혜택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개혁이 진행 중이다.

'보편주의나 선별주의나'의 논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에서 '베버리지의 원칙'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4월 1일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는 전국최초의 복지서비스가 시행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민선8기 광주시의 핵심과제로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광주만의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 △광주+돌봄 △긴급돌봄 세가지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영유아, 장애인, 노인에 집중됐던 복지서비스를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청년·중장년층) 등 5대 계층으로 확대

된다. 통합돌봄은 기존서비스와 달리 신청창구가 단일화된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돌봄콜'(1660-2642)을 통해 통합돌봄을 접수하면 된다.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돌봄콜로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 등에 동의를 하면 돌봄신청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돌봄창구에서 대행해준다. 그간 사회복지서비스는 종류가 방대해마다 사업마다 주관부서가 달라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따랐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시에도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하고 발급받는 데에도 복잡함이 수반돼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현재 중앙 부처 및 광주시에서 주관하는 돌봄서비스는 140개다. 서비스 주관부서만 중앙부처 5곳, 광주시 6개 실국에 담당할 만큼, 미로처럼 복잡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보편복지는 아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을 받는 소득층은 중위소득 85% 이하다. 중위소득 85%이하 층에 광주+돌봄 지원금액을 연간 150만원, 긴급돌봄비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연간 60만원이 지원된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복지시장의 한계를 찾아 빈틈을 메우겠다는 복지시스템은 광주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평가하고 싶다. 따뜻한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능가하는 대한민국의 표준 복지 기준이 되길 기원한다.

社說

재외동포청 광주 유치 치밀하게 준비를

광주시, 정부에 의향서 전달

광주시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에 재외동포청이 들어서면 민주·인권·포용도시광주의 면모를 전 세계에 부각시킬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정착과 지원에 필요한 폭 넓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갖추고 고려인마을 등 재외동포의 고된 삶의 여정을 다독여 온 광주로서는 당연한 도전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일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광주유치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전달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 나뉜 영사·법무·병무 등 재외동포 민원 업무를 일원화 시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기준 전 세계 193개국 732만 명의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그런 만큼 재외동포청의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은 재외동포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문화 활동 등을 지원할 인프라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귀환 운동을 펼치고 이들의 정착 지원 사업을 펼쳐온 광주로서는 최적의 입지인 셈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광주다움 통합 돌봄의 수혜 대상에 광주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 국적 동포 등 재외동포가 포함된 것도 광주의 자부심이다.

재외동포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재외동포의 구심점으로 중요하다. 국제기구나 해외도시와의 교류와 연대도 필요하다. 매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오는 5월에는 중앙아시아 재외동포 거점인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가 열리는 광주가 주목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 세계 20개국 40개 도시와 자매·우호교류를 맺고 있다는 것도 광주의 자랑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장점을 살려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범 시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외동포청의 광주 유치를 위해선 세계에 알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현안이다.

광주공공기관 혁신, 본연 역할 강화 초점

공공가치 실현이 우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달 23일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이날 "더는 비효율,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이 아닌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2일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숫자를 줄이면 시장의 임명권이 줄어들지만, 지금이 아니면 공공기관을 혁신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절박함 때문에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합기관 설립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앞으로 시의회 등과 깊이 있는 소통과 신속한 절차 이행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공공기관 혁신안은 단체장 교체 시기마다 반복됐던 공공기관장 인사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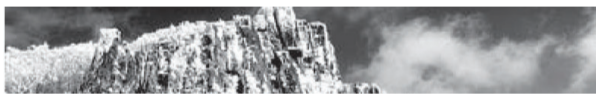
를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강 시장의 이같은 공공기관 혁신 의지와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할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해당 직원 반발과 진통도 예상된다. 시는 유사·중복 기능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고 했지만 지원기관과 사업성(수익) 추구 기관 등 성격이 다른 기관을 통합하는 경우도 있어 조직만 비대해진 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비와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비효율과 방만 경영은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말그대로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사업과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등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고 존재하는 이유다. 하여 실적만을 의식해 외형적 변화에 그치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기를 바란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처럼 효율성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서석대



커피 판매점에서 주문하는 커피 종류를 보면 연령대가 확연히 구분된다. 계절에 관계없이 중장년이상 세대는 주로 '핫(hot)'을, 그 이하세대는 '아이스(ice)'를 시킨다. 후자가 젊은세대 전유물이 된듯하다.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건강이 조금은 걱정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회용기는 아이스크림을 담는 플라스틱 컵과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용기 등을 말한다. 미세플라스틱은 길이 5mm 미만인 플라스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음식 활성화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시험 결과 일회용기에서는 개당 적게는 1.0개, 많게는 29.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반면 다회용기에서는 개당 0.7~2.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377잔)을 고려하면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으로 마실때 개인별로 노출되는 미세플라스틱량은 연간 약 2639개에 달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테이크 아웃 커피와 배달 음식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미세플라스틱을 더 많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비자들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危害性)은 아직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흡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북극과 남극은 물론 세계

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의 꼭대기 인근,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접히는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등 지구 모든 곳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타고대학 연구진은 국제 해양 환경 저널 '머린폴 루션블러터'에 발표한 논문에서 뉴질랜드 인근 바다에서 어선들이 잡은 대구 등 10여 종 155마리의 자연산 생선 샘플을 검사한 결과 75%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9년 호주 뉴캐슬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고, 월간으로 칫솔 한 개의 무게라고 밝히고 있다. 플라스틱은 유기물을 쉽게 흡착하므로 각종 독성물질을 농축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효율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플라스틱 욕망이 환경 파괴와 건강까지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초래한 셈이다. 이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텀블러(다회용기)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커피값도 절약하고 자신의 건강도 지키는 슬기로운 삶의 지혜를 즉각 실천할 때다.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윤리적 생활운동가인 루시 씨글(Lucy Siegle)이 제시한 '일상생활속에서 플라스틱 발자국(Plastic footprint)를 줄이기 위한 8가지 행동수칙(8R)'을 소개한다. 사용 축소(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사용 기록(Record)을 통한 소비 평가, 재사고(Rethink), 다른 제품 대체(Replace), 사용 거부(Refuse), 리필(Refill) 이다.

이기수 논설실장 kisoo.lee@jnilbo.com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www.jnilbo.com m.jnilbo.com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